

선진경제실 미주팀

(미국) 코로나19 관련 동향

날짜: '20.10.7일~10.14일

1. 확산 동향

- 10월 12일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7,787,548명이며 사망자는 214,446명임.
- 9월 8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3,301명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7월 24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치(74,818명)를 기록한 바 있음.
- 10월 12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46,614명, 338명 발생

그림 1. 미국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주: 붉은 실선은 7일 이동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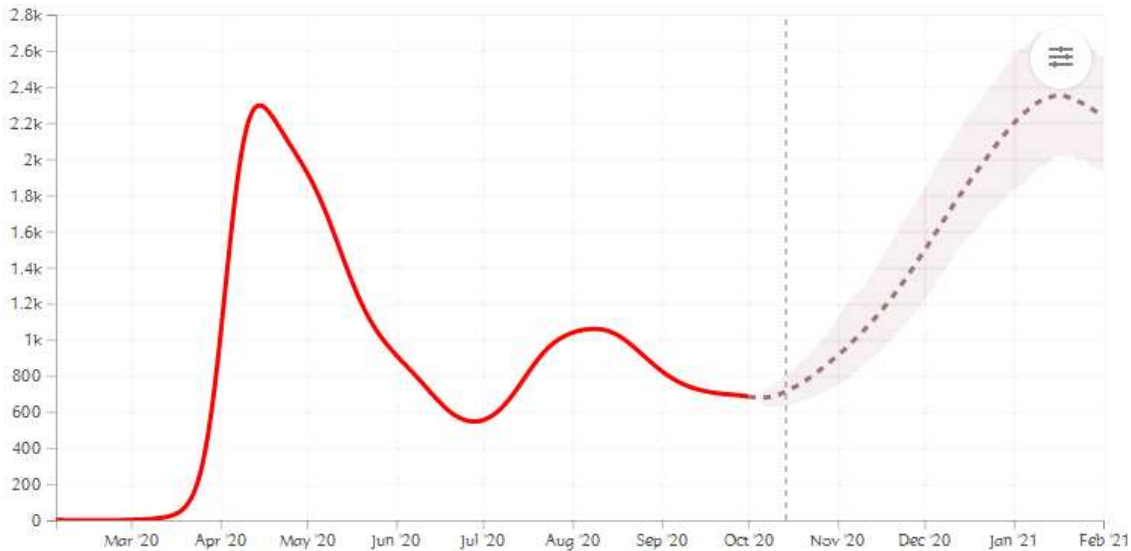
자료: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0.10.13.). "Trends in Number of COVID-19 Cases in the US Reported to CDC, by State/Territory",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cases-updates%2Fcases-in-us.html#trends.

- 워싱턴대 보건평가연구소*는 일일 평균 약 700명 수준을 유지하던 사망자 수가 10월 중순부터 2021년 1월 중순까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¹⁾
 - ※ University of Washington's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일일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0월 중순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1년 1월에는 이전 최고치(2,291명, 4.14일)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1)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2020.8.25.). "COVID-19 Projections", <https://covid19.healthdata.org/projections?sfns=mo>.

- 2020년 2월 7일 미국 내 첫 사망자 발생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394,693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그림 2. 코로나19 일별 사망자 수 전망



자료: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2020.10.13.). "COVID-19 Projections",
<https://covid19.healthdata.org/united-states-of-america?view=total-deaths&tab=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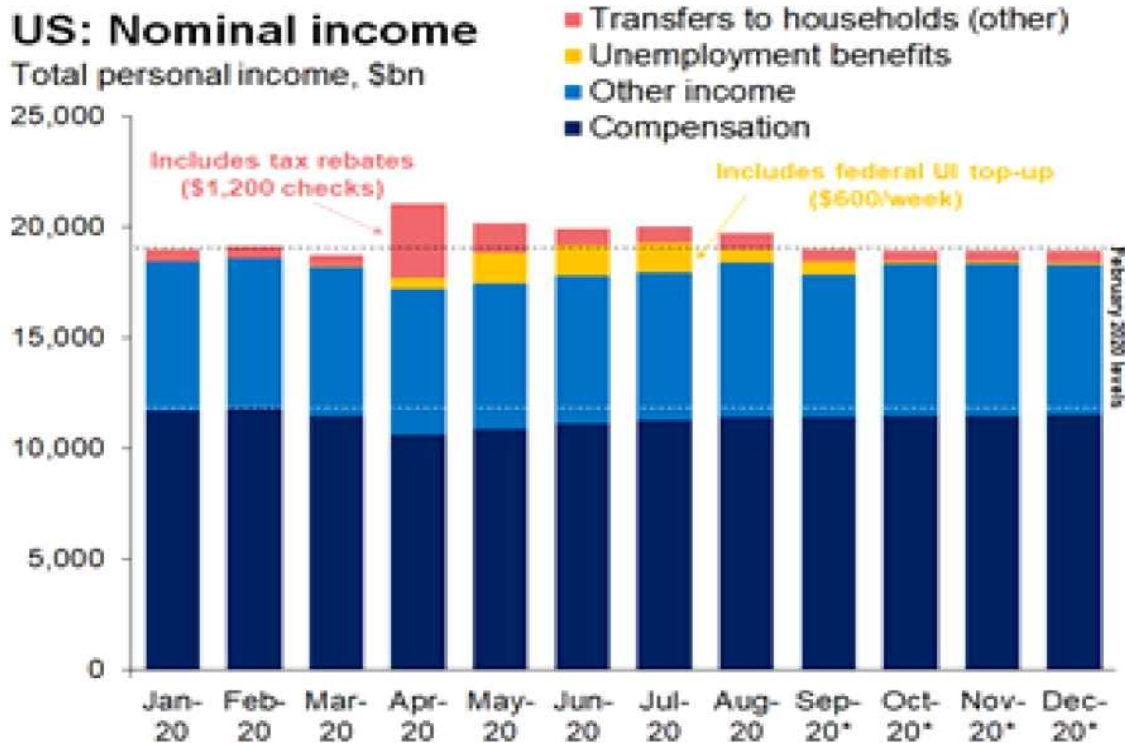
2. 경제적 영향

- Oxford Economics는 추가적인 임금지원프로그램(Lost Wages Supplemental Payment Assistance)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6,000억 달러(연 환산 금액)의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²⁾
- 10월 가계소득은 코로나19 발생 전 소득수준(level)에 비해 약 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가계소득 감소는 소비자 지출을 약 1.2%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 실질 GDP가 약 1.0% 줄어드는 것을 의미
-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500만 가구가 실업급여에 의지하게 되고, 주·지방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중소기업과 항공사와 같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은 10월에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2) NBC(2020.10.3.). "NEARLY 4 MILLION US JOBS HAVE VANISHED FOREVER",
<https://nbcpalmsprings.com/2020/10/03/nearly-4-million-us-jobs-have-vanished-forever/>.

그림 3. 미국 명목 개인소득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Oxford Economics(2020.10.9.). "Weekly Economic Briefing: US".

- 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향후 몇 달 동안 추가 부양책 미집행 시 2021년에도 경제가 둔화(stalling)되거나, 심지어 새로운 경기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³⁾
- 코로나19 섯다운 이후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으나, 최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수와 같은 일부 노동시장 지표들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경기회복을 하는데 정부가 “너무 적은 지원(too little support)”을 한다면 “불필요한 어려움(unnecessary hardship)”을 겪을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
 -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기준금리가 실질적으로 ‘제로’인 상황에서 연준은 불완전한(imperfect) 정책 수단만을 가지고 미국 경제위기 대응의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게 됨.
 - Patrick Harker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미국 경기회복 전망의 핵심은 추가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경제는 2023년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will probably not regain)으로 예상⁴⁾

3) Financial Times(2020.10.11.). “Fed’s Powell is chief cheerleader for fiscal stimulus”, <https://www.ft.com/content/91322629-0668-49b5-aba0-13bd72b436e8>.

4) Reuters(2020.10.7.). “Fed’s Harker: Recovery plateauing, return to old levels 'will take some time'”,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fed-harker-idUSKBN26R2VQ>.

3. 정부의 대응

-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부양책 협상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발표(10.6일)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어 의회에 항공사 지원 등 일부 부양책 타결을 촉구(10.7일)⁵⁾
 -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경기부양책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전까지 민주당과의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을 중단할 것을 자신의 협상팀에 전격 지시(10.6일)한 바 있음.⁶⁾
 -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항공사 급여 지원(250억 달러), 중소기업 급여지원프로그램(1,350억 달러), 전국민 현금 지급안(1인당 1,200 달러)에 대해 지지해 줄 것을 요청⁷⁾
 - 경기부양책의 포괄적 타결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몇몇 방안을 우선 선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됨.
 - 일부 정책은 기존의 부양책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부양책 규모를 1.6조 달러에서 1.8조 달러로 늘려 민주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10.9일).⁸⁾
 - 민주당 중심의 하원은 지난 5월 3조 달러 규모의 긴급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공화당과의 협상을 위해 2.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음.⁹⁾
 -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지방 정부 재정지원에 최소 4,36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올해 초에 지원된 1,500억 달러 이상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 또한 전국민 현금 지급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전과 같이 주당 600달러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공화당은 400달러를 주장
 - Mitchell McConnell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추가 경기부양법안이 향후 3주 이내에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¹⁰⁾

5) CNBC(2020.10.7.). "Stocks rise after Trump backs relief for airlines—Larry Kudlow and others on what's next", <https://www.cnbc.com/2020/10/07/stock-market-today-stocks-rise-after-trump-backs-relief-for-airlines.html>.

6)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2020.10.7.). "I have instructed my representatives to stop negotiating until after the election ... we will pass a major Stimulus Bill that focuses on hardworking Americans and Small Business",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1313551795646541824>.

7) CNBC(2020.10.7.). "Trump reverses course on coronavirus relief talks, dangles new \$1,200 stimulus checks.", <https://www.cnbc.com/2020/10/07/trump-reverses-course-on-coronavirus-relief-talks-dangles-new-1200-stimulus-check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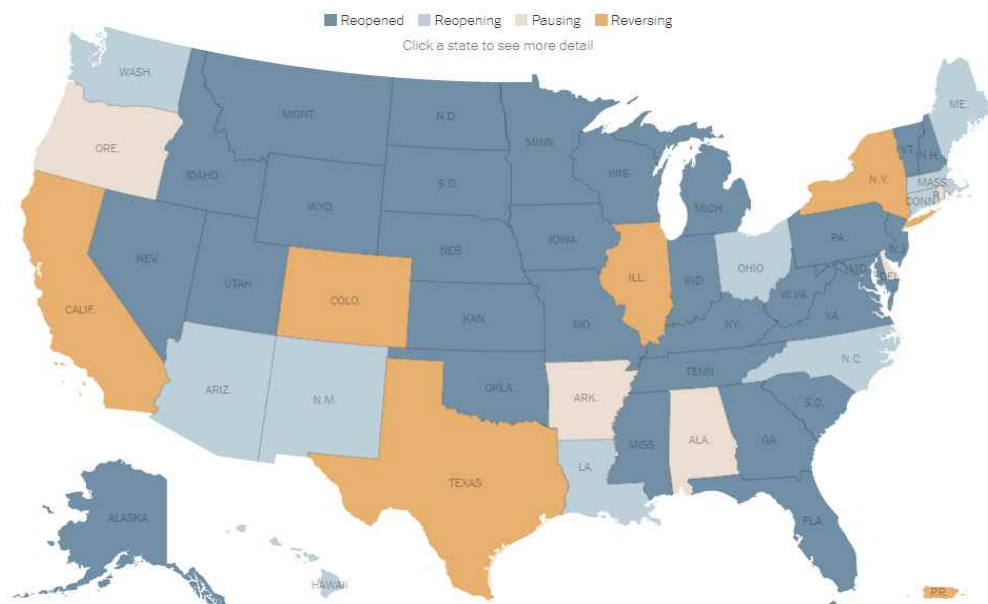
8) CNBC(2020.10.9.). "Trump raises coronavirus stimulus offer to \$1.8 trillion, then says he wants bigger bill than Dems or GOP", <https://www.cnbc.com/2020/10/09/trump-raises-coronavirus-stimulus-offer-to-1point8-trillion-sources-say.html>.

9) Nancy Pelosi Speaker of the House(2020.10.2.). "Transcript of Pelosi Interview on MSNBC's Live with Stephanie Ruhle", <https://www.speaker.gov/newsroom/10220-3>.

-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므누신 재무장관이 어렵게 추가 경기부양법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과정을 거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

- 4월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며 각 주별로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해 왔으나, 6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경제활동을 다시 제한하고 있는 상황
- 텍사스주,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뉴욕주는 경제활동을 다시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
- 오리건주, 앨라배마주 등 5개주는 경제활동 재개를 일시적으로 중단

그림 4. 주별 경제 재개 현황



자료: The New York Times(2020.10.13.). "See How All 50 States Are Reopening (and Closing Again)".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us/states-reopen-map-coronavirus.html>.

10) Business Insider(2020.10.9.). "Mitch McConnell says an economic stimulus package is 'unlikely in the next 3 weeks' as the White House renews its push for aid", <https://www.businessinsider.com/mitch-mcconnell-stimulus-package-unlikely-three-weeks-trump-economy-odds-2020-10>.

4. 코로나19 관련 이슈

- Johnson & Johnson이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3상)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짐(10.13일).¹¹⁾
 - 환자 6만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단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작용 사례(adverse event)가 나와 시험을 중단하였음.
 - 미국 4위의 제약회사인 Johnson & Johnson은 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을 성공적 완료한 후 매년 10억회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었음.
- 트럼프 대통령이 투여 받은 리제네론社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REGN-COV2)의 개발과정에 태아세포가 사용된 것에 대해 리제네론社는 다른 제약회사들도 사용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10.7일).¹²⁾
 - 미국은 학술연구에 태아 세포조직이 사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2020년 8월에 14건의 임상시험 요청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1건만 승인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백신 개발회사들이 임상시험 참가자들에 대한 2개월치 이상의 투약안전 데이터를 제공해야 코로나19 백신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¹³⁾
 - 이에 따라 대선 전까지 백신의 시중 배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11) CNBC(2020.10.13.). "Johnson & Johnson's coronavirus vaccine trial is paused after 'adverse event' in a participant", <https://www.cnbc.com/2020/10/13/jnjs-coronavirus-vaccine-trial-paused-after-adverse-event-reported-36-hours-ago.html>.

12) Financial Times(2020.10.9.). "Covid drug used to treat Trump was tested using foetus cells", <https://www.ft.com/content/7efde186-a056-48f0-a32b-d4353b4639c1>.

13) CNBC(2020.10.6.). "FDA posts vaccine guidelines blocked by White House", <https://www.cnbc.com/2020/10/06/fda-posts-vaccine-guidelines-blocked-by-white-house.html>.

표 1. 美, 코로나19 대응 정책

날짜	주요 내용
3.3일	• 기준금리 0.5%p 인하
3.6일	• 트럼프 대통령 83억 달러 규모의 '1차 긴급예산법' 서명 (코로나19 백신개발, 의료장비 지원)
3.13일	• 트럼프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포 (500억 달러 추가 자금 지원, 전략비축유 추가 확보,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3.15일	• 기준금리 1.0%p 인하(0.0%~0.25%) • 유동성 공급확대를 위해 7,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5,000억 달러)와 주택저당증권(MBS, 2,000억 달러) 매입 추진
3.18일	• 1,000억 달러 규모의 '2차 긴급예산법'에 서명 (유급휴가 및 유급병가 지원, 코로나19 무료검사)
3.19일	• 9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체결(최소 6개월)
3.23일	• 국채, 주택저당증권(MBS) 무제한 매입 • 자산담보증권(ABS)을 매입하여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등의 자금조달 지원
3.27일	• 경기부양법안 하원통과 • 트럼프 대통령 2.2조 달러 규모의 '3차 긴급예산법(CARES Act)' 서명 (가계 현금지원, 긴급실업수당, 항공업계 등 지원) • 성인과 미성년자에 대해 각각 1,200달러, 500달러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 (연소득 75,000 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 100달러 당 5달러씩 감액 지원)
4.11일	• 50개주 전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
4.24일	• 트럼프 대통령 4,840억 달러 규모의 '4차 긴급예산법' 서명 (중소기업 급여보호, 소상공인 긴급대출, 병원지원금, 코로나19 검사프로그램 등 지원)
5.15일	• 하원,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통과
6.16일	• 트럼프 행정부 도로·다리, 5G 무선인프라, 지방 광대역통신망 등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검토
7.27일	• 상원 공화당 1조 달러 규모의 '5차 경기부양법안' 공개
7.28일	• 연준 긴급대출프로그램의 운영시한을 2020년 12월말까지 연장
8.8일	• 트럼프 대통령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 (급여세(payroll tax) 유예, 실업수당 지급 연장,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연장, 주택 압류 최소화 등)
8.27일	• 연준 장기 목표 통화정책 운용 기준 수정 (장기적으로 2% 물가목표 달성 → 장기간에 걸쳐 '평균' 2% 물가목표 달성)
9.10일	• 공화당 주도 5,000억 달러 규모로 대폭 축소된 추가 경기부양법안 상원에서 부결
9.15일	• 중도 성향의 하원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1.5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추가 경기부양법안을 제시